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정책소개

2017년 자율관리육성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금년부터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평가, 사업관리 등 각종 정보를 자율관리어업 소식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1월호에는 2017년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주요 추진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17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국비예산은 총 55억원으로 90여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표>와 같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교육은 최대한 유지하되 소규모교육(1:1형식) 및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과 수협에서 추진해 온 교육을 (사)한국수산회로 일원화하였다. (사)한국수산회에서는 2016년 평가에서 500점 미만 또는 참여신규공동체 전체(약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방문하고,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2.19 개정) 제17조(공동체 선정취소)에 따라 참여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

점수가 1,000점 미만 기준으로 계속하여 500점 미만인 경우 기존 공동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전문컨설팅을 수산자원관리, 각종 시설 안전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고, 컨설팅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해당 국가 관련기관 방문 및 우수사례 현장학습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2016년부터 격년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17년에는 이를 대신하여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자율관리 정책에 대한 유형별 토론회 개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평가체계 및 사업관리 등을 쉽게 이

해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업종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어촌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컨설팅 분야 및 활동내용>

| 구분 | 분야 | 주요 활동내용 |
|--------|-------|-----------------------------------|
| 전문 컨설팅 | 자원 관리 | 자원생리·생태, 불법예방 지도, 자원조성, 어업분쟁 조정 등 |
| | 안전 관리 | 어선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 |
| | 경영 관리 | 재무, 브랜드·포장지·상표 개발, 특허 등 |

<자율관리어업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 보조율 |
|------------|----------------|---------------------------------|-----------------------------|
| 선진공동체 | 심의 선정 | 7.14억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 모범공동체 | 평가점수 700점 이상 | 1.2억원 | |
| 협동공동체 | 평가점수 700점 이상 | 1억원 | |
| 참여공동체 | 평가점수 500점 이상 | 0.8억원 | |
| ’16년 우수공동체 |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 | 최우수 1억원 우수 0.8억원 장려 0.5억원 | |

신년사

‘수산업, 희망있는 산업으로 재도약’

정유년 새해를 맞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수산업계는 고등어 미세먼지, 콜레라 파동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아 수산물 소비가 격감하면서 어업인 뿐 아니라 수산물 요식업소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전례없는 고수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양식장에서 어패류 폐사현상이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를 맞아 고군분투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업체와 유관단체가 힘을 모아 지난해 수산물 수출신장세를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수산업이

‘희망있는 산업, 도전해 볼만한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회는 올해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한편 우리 수산업이 희망있는 산업으로 재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수산계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수산정책 현안과제를 수렴해 여러 수산단체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금년 한해 공동체 어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알림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원고 모집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01년 실시된 이후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참여의지 및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하여 전국의 어업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공동체 주요 활동사항, 성공사례 등을 보내 주시면 적극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체 어업인을 비롯한 자율관리어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 모집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및 관련단체, 지자체 업무담당자
- 내용 : 공동체 주요활동,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등
- 마감 : 매월 10일

*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정부 3.0

“내가 지켜줄게, 우리 바다야”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넓은 바다라도 막 쓰면 안 돼요.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첫걸음입니다.

넓은 바다라서 혼자선 안 돼요.
해양수산부가 확산운동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아끼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꿈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 어장환경개선, 불법어업 방지를 실천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있습니다.

www.jayul.go.kr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함께합니다.

경남도의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6.11.03. 조례 제4202호)」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환경개선, 생산관리, 자원조성 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어장관리·수산자원 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정치망수협-고성군정치망협의회 대구 인공수정란 4,476만개 방류



경남정치망수협과 경남고성군정치망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월 13일 고성군 삼산면 자란만 해역에서 대구 인공수정란 4,476만개를 방류했다. 정치망 어업인들은 대구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신규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내수면 5개 공동체 포함, 31개 공동체 신규 참여

지난해 31개소의 공동체가 신규로 참여해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수는 1,160개소로 집계됐다.

2016년 신규 참여한 31개 공동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을어업 12개소, 어선 8개소, 복합 6개소, 내수면 5개소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3개소, 울산 1개

소, 경기 1개소, 전남 3개소, 전북 1개소, 경남 8개소, 경북 4개소, 충남 8개소, 충북 2개소로 집계됐다. 다음은 지난해 신규 참여한 31개 공동체 현황이다.

■ 신아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문정일)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72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장곡4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종덕)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97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가로림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한광천)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2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진동어촌계복합어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조영근)

- 소재지: 경남 창원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43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창원남시어선어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창헌)

- 소재지: 경남 창원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13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능양마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성필)

- 소재지: 경남 통영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4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매물도 대항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진오)

- 소재지: 경남 통영시 대항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28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마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종만)

- 소재지: 경남 사천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24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하일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조경식)

- 소재지: 경남 고성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12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지난해 신규로 31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함으로써 2016년 말 현재 공동체 수는 1,160개소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군위군내수면어로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윤주호)

- 소재지: 경북 군위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2월 15일 / 18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향수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손승우)

- 소재지: 충북 옥천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3월 21일 / 5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메기양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권금열)

- 소재지: 전북 김제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3월 24일 / 33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양식)

■ 사진3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임한규)

- 소재지: 경북 영덕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5월 7일 / 2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고장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창수)

- 소재지: 충남 보령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4일 / 20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학성선주협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명관)

- 소재지: 충남 보령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37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울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유영성)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54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정당2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태일)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7일 / 86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강진만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하동수)

- 소재지: 경남 남해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12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유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대경)

- 소재지: 경남 남해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6월 23일 / 45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창우어선어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양대일)

- 소재지: 전남 영광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7월 1일 / 15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완도 낭장마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경배)

- 소재지: 전남 완도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7월 1일 / 75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장산 오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연신)

- 소재지: 전남 신안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7월 1일 / 10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평택 양양호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임국현)

- 소재지: 경기 평택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7월 20일 / 23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당시어선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종만)

- 소재지: 울산 북구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8월 31일 / 20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보은 화남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진섭)

- 소재지: 충북 보은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9월 6일 / 6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창포리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유외중)

- 소재지: 경북 영덕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0월 21일 / 5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포항정치성구획어업협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정철)

- 소재지: 경북 포항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0월 21일 / 18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미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희권)

-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1월 8일 / 56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우동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몽덕)

-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1월 8일 / 40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신암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천대원)

- 소재지: 부산 기장군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1월 8일 / 60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독산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진학)

- 소재지: 충남 보령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6년 11월 30일 / 8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공동체 탐방 /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깨끗한 남한강 조성 1등 공신 ... 다슬기 체험마을 조성도 추진



김남성 양평내수면공동체 위원장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양수리에 팔당댐이 있다. 이곳에서 여주 이포보까지 남한강 일원을 마을어장으로 삼고 있는 양평내수면공동체(위원장 김남성)는 2013년 23명의 회원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지금은 56명으로 증가했다. 공동체 참여 전까지 양평내수면공동체는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인 조업으로 인한 남획이 횡횡했다. 또 경기도 내 내수면어촌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경쟁적으로 조업하다보니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내수면공동체는 자율관리 참여 이후 어업인간 화합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어촌계 부녀회를 결성, 모임 시 계원과 같이 식사하며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



양평내수면공동체 회원들이 남한강 조업구역에서 어장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또 조업구역 중복으로 다슬기를 잡는 형망어업인과 자망어업인간 불화가 지속되자 자체 규약을 정해 조업시간을 달리함으로써 분쟁 해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다슬기는 1.8cm, 쏘가리는 22cm 이하는 잡지 않는 등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한편 적당 어구 수도 형망은 1틀, 자망(50m)은 10개로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조건을 적용해 운용했다.

특히 월 3회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주변청소 및 페어구 수거작업은 깨끗

한 남한강 조성의 1등 공신으로 주위의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자원보호와 함께 자원조성을 위해 해마다 다슬기, 쏘가리, 참게, 뱀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방류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는 보다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르면 내년 말경 다슬기 체험마을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 곤충박물관, 들꽃수목원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체험시설과 연계, 공동체 사무실 인근의 유희 하천부지를 다랭이 논처럼 조성해 어린이들이



공동체 회원들의 페어구 수거모습.

다슬기와 피라미 등을 뜯쳐로 잡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닷가의 어촌체험마을과 유사하지만, 내수면공동체에서는 쉽지 않은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남한강의 황포돛배를 재현해 두물머리에서 이포보까지 유람선을 운항함으로써 어업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공동체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평내수면공동체는 올해 1톤 활어차를 공동 구입해 구리, 노량진, 가락동, 경동시장 등 수도권의 주요 민물고기 판매장에 직접 물고기를 판매하는 유통 시범사업을 통해 열악한 내수면어업의 유통 한계를 극복하는데 공동체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김남성 위원장은 밝혔다.

낙시어선 전문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운영체계 일원화·거점교육기관 지정 등



해수부는 최근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돼 2016년 11월 30일부터 낙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낙시어선전문교육을 받도록 교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낙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담당을 2017년부터는 어촌어항협회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교육과목을 '승객안전관리'와 '승무원 안전수칙' 등으로 개편하고, 표준 교재 개발과 관련 학과 교수들 강사로 초빙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일정을 정례화해 낙시어선 어업인들의 수강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 기회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새롭게 바뀌는 낙시어선 전문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수산업경영인 지원사업 사업규모 늘리고 지원요건 완화

올해 각각 500억·1,200억원 용자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 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용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과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용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평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용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지난해(300억원)보다 대폭 늘렸다. 자금 신청 대상자는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

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단 조선평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용자 규모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1인 당 최대 신청가능 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그동안은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 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해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오는 1월 31일까지 공고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 - 새해 수산업 기상도

연근해어업 '흐림' ... 양식산업 '맑음' 예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갖고 올 한해 수산업 각 분야를 전망했다.

2017년 연근해어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진 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수산업에서 갈수록 비중이 큰 양식산업은 생산 호조가 예상돼 그나마 나을 전망이다. 수산식품산업은 내수 비중 감소, 수출 증가라는 지난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나온 올 한해 예상되는 수산의 명암이다. KMI가 내놓은 올 한해 수산전망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연근해어업 '불안'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96만 4,000톤. 1972년 95만6,000톤을 기록한 이후 44년 만에 100만톤 밑으로 떨어진 최저 수준이다. 한반도 전반에 나타난 고수온으로 인한 어군변화에 따른 어획부진이 주요 원인이었다. 주요 어종의 산란자원량 감소, 미성어 유통 등 수산자원 감소 요인도 생산부진을 가져왔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금액은 3조6,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2017년 역시 연근해어업 생산은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에 어업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어업 생산 부진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근해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33만8,827톤으로 설정됐다. 이상고온 완화, 어린물고기 자원보호 강화를 근거로 지난해 생산이 다소 좋았던 고등어, 도루묵, 꽃게 등의 어종이 증량된 것이다.

올해 연근해어업을 회복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산자원관리와 보호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수산자원 이용 주체가 즉 어업인 스스로 바다와 자원을

관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어업 중심의 어업법 제정이나 어업구조개편 등 시장기반형 근해어업으로 변화돼야 한다. 아울러 비용절감형 어업 생산구조 전환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밖에 철저한 어린물고기 보호, 폐어구 관리를 통한 유령어업 피해 최소화, 중국 불법조업 차단 등도 중요 과제다.

양식은 그나마 '희망적'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다. 지난해 해면양식 생산량은 188만톤, 생산액은 2조3,111억원으로 전년보

다 각각 12.3%, 8.6% 늘었다. 양식수산물의 수출도 활발했다. 지난해 수출량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7만 2,511톤을 기록했다.

올해 양식산업도 비슷한 전망치가 예상된다. 연근해와 원양어업 생산량 감소로 양식산업의 중요성 역시 더 커질 전망이다. 진일보하고 있는 양식 기술 개발과 질 좋은 사료 생산 등에 따른 예상 결과다.

올해 양식산업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고수온, 적조, 콜레라 등 상시적 재해나 재난발생에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 협업사업이 필요하다. 미래 양식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협업 모델 마련과 실증단지 조성 등이 예이다. 외해가두리 양식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적 적지분석과 펀드 조성, 법제도 정비 등도 중요하다. 내수면어가를 위한 내수면 6차 산업화 추진도 현안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2%다. 지난해 해면양식 생산량은 188만톤, 생산액은 2조3,111억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12.3%, 8.6% 늘었다. 올해 양식 산업도 비슷한 상승세가 관측된다. 날로 발전하는 양식 기술 개발과 질 좋은 사료의 생산, 어가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예상 결과다.

2017년 한·중 어업협정 극적 타결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노력에 초점
쇠창살 中어선 발견 즉시 처벌 ... NLL 인근에 중국 함정 상시배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사진 왼쪽이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대방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각각

1,600척에서 1,540척으로, 어획량은 6만톤에서 5만7,750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어선 수와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 저인망 어선은 올해보다 29척 줄었다.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일부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62척에

서 50척으로 20% 줄었다.

중국 불법 어선 대책도 협상에 담겼다. 한·중 양국은 중국 불법 어선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중국의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단속선이 함께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공동 순시'도 재개된다. 공동 순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상황을 중국 당국이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로 2005년 우리 측 제의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나라 해경 고속 단정이 중국 어선에 침몰당하면서 10월부터 잠정 중단됐다. 또 앞으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대원 등의 승선을 막으려고 배에 쇠창살이나 철망 등을 설치만 해도 우리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쇠창살 등을 설치한 어선을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2017년 TAC 물량 34만60톤 설정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계획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을 34만60톤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종별로 고등어,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각각 1,000톤, 708톤 높게 설정했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게는 288톤 적게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해 해수부는 전년 대비 187톤 감소된 3,435톤을 설정하도록 권고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지자체별 허용 어획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